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14 October 2020

Original: English

제 75 차 회기
잠정적 의제 72(c)*
인권 증진 및 보호: 인권 상황 및 특별 절차 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사무 총장 Note

요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 결의 74/166 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를 제출한다. 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최근 인권 상황을 개괄하여 다룬다. 아울러 한반도 내 평화, 안보 및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핀다. 특별보고관은 인권 상황 관련 우려되는 사안을 국제공동체에 알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다.

* A/75/150.

** 본 보고서는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기한을 넘겨 제출됐다.



목차

	<i>Page</i>
I. 서문.....	3
II. 정치 및 안보 상황	3
I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5
A. 보건권에 미치는 영향	5
B. 정보 접근 및 통신에 미치는 영향	6
C.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6
D. 인도적 지원	8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9
A. 노동 제도.....	9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상황.....	14
C. 강제 실종 및 외국인 구금	15
V. 병행전략: 책임 규명과 협력.....	16
VI. 결론.....	17
VII. 권고.....	18

I. 서문

1.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엄격한 국경 통제 조치를 포함하여 예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경 폐쇄가 길어지면서 무역과 상행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반적인 경제와 국민 생계가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외교 사절이나 국제기구가 상주하며 활동하기 불가능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이하 “북 이탈자”) 수도 급격하게 감소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제 관계자가 제한적으로만 상주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입국 북 이탈자 수가 감소하여, 해당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보는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
2. 특별보고관은 아직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도록 초청받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별보고관은 2019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앞서 2019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태국을 방문한 이래 이동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및 주변국을 공식으로 방문하지 못했다. 직접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어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 피해자,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유엔 기구 및 정부와 온라인으로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의 영향권 아래 있는 이들의 인권 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재 조치가 경제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현 노동 제도와 관련된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II. 정치 및 안보 상황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7년 9월 이후 핵 실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 이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지만 수차례 미사일과 무기 실험을 시행했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발사했다(S/2020/151, 별첨, 4 쪽). 비핵화 및 평화 대화 관련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채택됐으나 비핵화 및 제재 해제 관련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가족 상봉이 가능한 영구 시설을 마련하고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화상으로 상봉하기로 한 합의 또한 안타깝게도 이행되지 않았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심각하며, 인권 침해 건에 대한 정의 실현이나 책임 규명에 있어 개선 또는 진전을 이뤘다는 신호가 없다. 투명성, 참여 및 인권 개선은 평화 협상과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에 중요하다. 이는 한반도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지니며 한반도 주민의 지지를 받는다.
5. 제재 조치 이행 확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경제권과 사회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1874 (2009)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패널은 2017년 채택된 네 건의 제재 조치가 “해당국 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특히 제재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문에 고용됐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며, 실직이나 상행위 제한 조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S/2020/151, 별첨, 문단 209)고 언급했다. 가령 수출 제한이 적용되는 섬유 부문이나 비공식 상행위에 주로 여성이 종사하며,

이들 부문이 제재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경우, 여성 인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제재 조치가 2017 년 채택된 이래로,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량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 년 수출액은 26 억 3000 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017 년 해당 수치는 16 억 5000 만 달러, 2018 년은 2 억 달러로 감소했다.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중국 수출량은 2017 년과 비교하여 2018 년 90 퍼센트 감소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2019 년 95.2 퍼센트로 증가했다.³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일반 주민은 경제 상황 악화와 더불어 정부의 재화 및 노동력 기여 요구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다.

6. 2020 년 1 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가 발발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유행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당하는 동시에 전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에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초고강도 제재 조치 하에 있었을뿐만 아니라, 구조적 경제 문제와 유례없는 기상 악재도 감당해야 했다. 당국은 2020 년 1 월 이후 국내외 여행을 모두 제한하고, 도시나 지역 간 이동도 제한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이행했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0 년 8 월과 9 월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었다. 그 결과 도로, 철도, 다리 등 기반시설과 주택 및 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엄격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로 인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유엔 인도주의 활동 기구의 외국인 직원 상주 인원 수가 기존 대비 20 퍼센트 아래로 줄었고, 이는 자연재해 피해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태풍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6 차 전원회의가 8 월 19 일 열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당국이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언급했다.⁴ 이처럼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삼아 2021 년 1 월에 발표될 새로운 5 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긴장 상태를 고조시켰는데, 이는 2020 년 6 월 대한민국 내 시민사회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층을 비난하는 전단을 풍선에 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날려보낸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영 매체는 6 월 9 일 김여정과 남북 관계 담당 고위급 관계자 김영철이 6 월 9 일자 정오를 기준으로 남북 간 통신 선 모두를 단절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 월 16 일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어서 김여정은 비무장지대에 군인을 재배치하고 반정부 전단 1200 만 장을 남측으로 날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¹ 안보리 결의 2371 (2017), 2375 (2017), 2397 (2017)는 각각 2017 년 8 월, 9 월, 12 월에 채택됐다.

² 홍제화,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 경제”,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 2020 년 8 월, 2 쪽.

³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리포트 2019”, vol. 3, 4 쪽(국문본) 참조

[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FileDown.do?nPostidx=8789&nIndex=2&origlnFileNm=%EB%AC%B4%ED%98%91%EB%B3%B4%EA%B3%A0%EC%84%9C-2019%20%EC%83%81%EB%B0%98%EA%B8%B0%20%EB%B6%81%EC%A4%91%20%EB%AC%B4%EC%97%AD%EB%8F%99%ED%96%A5%EA%B3%BC%20%EC%8B%9C%EC%82%AC%EC%A0%90\(%EB%82%A8%EB%B6%81%ED%98%91%EB%A0%A5%EC%8B%A4\).pdf](http://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FileDown.do?nPostidx=8789&nIndex=2&origlnFileNm=%EB%AC%B4%ED%98%91%EB%B3%B4%EA%B3%A0%EC%84%9C-2019%20%EC%83%81%EB%B0%98%EA%B8%B0%20%EB%B6%81%EC%A4%91%20%EB%AC%B4%EC%97%AD%EB%8F%99%ED%96%A5%EA%B3%BC%20%EC%8B%9C%EC%82%AC%EC%A0%90(%EB%82%A8%EB%B6%81%ED%98%91%EB%A0%A5%EC%8B%A4).pdf)

⁴ NK News 에서 제공하는 조선중앙통신 기사 참조 <https://kcnawatch.jp/newstream/1597875650-385884100/8th-congress-of-wpk-to-be-convened/>.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은이 6월 23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군사 행위 계획 중단을 명령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지도층을 비난하는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이다.

9. 대한민국 국방부는 9월 24일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47세 공무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치안군에 의해 사살됐으며, 이후 시신은 소각됐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해명을 요구하고,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측은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에서 전보를 보냈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알렸다. 해당 건은 치안군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해당 공무원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 무단 입국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국가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대한민국 또한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I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10.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20년 9월 17일 기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3374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⁵ 아울러 9월 17일 기준 총 3만 1773명이 격리됐으며, 이 중 3만 1163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4월 23일 국가 긴급 방역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결혼식, 장례식, 성년식, 제사를 포함하여 대규모 모임에 참석하지 말도록 했다. 정치 행사 참여, 농업 활동, 직장 및 당 기관 차원의 총화를 위한 모임은 계속되고 있다. 개성시에서 7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건이 발생한 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개성시를 봉쇄했다. 봉쇄 조치는 8월 14일 해제됐다. 개성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하여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최근 다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간 한 남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보건권에 미치는 영향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전체 인구의 47.8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1220만 명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영양 부족을 겪었다.⁶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전 결핵 환자 비율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로도 기록됐는데, 이는 인구 대다수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2020년 1월 말 중앙비상방역부문을 가동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조율하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성과 협력을 통해 준비 및 대응 조치를 돕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4월 올해 보건 부문 예산액을 7.4퍼센트 인상하며, 국방비 예산은 증액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⁷ 정부는 2020년 초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발발하자 전국 보건의료 시설에 지침을 내려 예방

⁵ www.nknews.org/2020/09/north-korea-tested-3374-people-for-covid-19-all-results-negative-who-says/ 참조.

⁶ 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보고서 2019: 경기 둔화 및 침체로부터 보호*(로마, 유엔 식량농업기구, 2019), 126 쪽.

⁷ 2019년 보건 부문 예산은 5.8퍼센트 증가했다.

조치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염병 학자, 의사, 간호사, 농업성 축산과 관계자로 구성된 235 개 기동팀을 꾸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건을 조사하도록 했다고 알려진다.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대유행병이 어느 정도로 퍼졌는지 여전히 알려진 바 없으나, 보건의료 시설 수용력이 제한적이기에 우려를 낳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근 몇 년간 보건 체계 현대화, 의료 기술 발전, 국내 자체 의약품 생산, 보건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0 년 3 월 17 일 평양종합병원 건설 개시를 알리며 칠 개월 후인 2020 년 10 월 10 일까지 완공하도록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 지역에 상당 수의 진료소와 병원을 갖추고는 있으나, 대다수가 최신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보건의료 시설로 적절한 물 공급이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의약품 및 장비가 공급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약 900 만 명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56 조 및 72 조와 관련 법은 전국민에게 무상의료를 보장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치료와 의약품을 받기 위해 돈이나 식량 등을 지불한다. 의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약국이나 비공식 시장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자가 처방할 수 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 국경 봉쇄 이후 의약품 값이 급격하게 올랐다고 알려진다.

B. 정보 접근 및 통신에 미치는 영향

13. 국영 매체는 2020 년 1 월 말부터 대대적으로 대중에게 보건 정보 전달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정부의 소득 및 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적십자는 2 월 북중 국경 지역에 자원 봉사자를 파견하여 보건 증진 캠페인 및 검사 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4 월 국영 매체를 통해 주류 섭취를 자제하고 의사 승인없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마스크를 자주 교체하며, 마늘, 양파, 꿀 등 지역 식자재를 적극 섭취하여 감염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⁹ 정부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어 전자책을 발행했다고 알려진다.¹⁰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걸린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 모두를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을 비롯하여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소식에 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제한한다.

C.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영향을 받기 전에도 2019 년 4 월 기준 인구 40 퍼센트에 해당하는 1010 만 명이 이미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며 식량 지원을 시급히 필요로 했다.¹¹ 해당국은 매년 봄부터

⁸ 유엔개발계획, 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2019”, 2019 년 3 월, 7 쪽.

⁹ www.nknews.org/2020/04/in-covid-19-fight-north-koreans-told-to-avoid-alcohol-and-unapproved-medicines/?t=1586308291537 참조.

¹⁰ 인구 대다수는 국내용 스마트폰으로 소식을 접한다. www.nknews.org/2020/03/north-korea-published-an-e-book-on-coronavirus-state-media/ 참조.

¹¹ 인도지원조정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필요와 우선순위 2020”, 2020 년 4 월, 5 쪽 및

가을 추수 전까지 주식(主食)이 부족한 상황을 겪는데, 2020 년은 상황이 더욱 열악했다. 2019 년 수확량이 적었을 뿐 아니라 2020 년 1 월부터 장기간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식량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식량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 중국과의 3 월과 4 월 교역량은 90 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2020 년 상반기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74.7 퍼센트 감소했다.¹² (4 월 무역량은 2100 만 달러를 기록했고, 5 월 무역량은 5800 만 달러를 기록하여) 5 월 무역량은 다소 증가했는데, 수입 품목이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 기본 필수품으로 한정됐다. 국경 지역 거주자로 상행위로 생계를 꾸리는 대다수는 수입원을 잃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산이나 가구를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산에서 약초나 먹을거리를 채집하고 산악 지대에 작은 밭을 일구는 등의 노력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알려진다. 많은 세대가 하루 두 끼를 먹기조차도 어려우며, 일부는 굶주림을 겪거나 노숙자가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알려진다. 정부는 이러한 빈곤층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거나 국가배급제도를 통해 배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꽃제비(노숙아동)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주 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충분치 않은 식량을 이유로 시설을 이탈하기도 하지만,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를 위해 이들을 실내에 머무르도록 강제한다는 보고도 있다. 노숙아동 수 증가는 경제 상황 악화를 보여주는 신호이다.

16. 농부는 종자를 심거나 모를 키우거나 모내기를 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비료나 휘발유 등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2020 년 상반기 비료 수입은 총 438 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도 대비 9 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¹³ 농업 물자 접근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를 취하기 전에도 이미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떨어졌으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더욱 접근성이 악화됐다. 물자 제공이 충분치 않아 2020 년 9 월과 10 월 추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시기 추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연간 생산량의 약 90 퍼센트를 수확한다. 2020 년 5 월 19 일 연구 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 쌀 생산량은 136 만 톤으로 예상되며,¹⁴ 이는 2018 년-2019 년 생산량 예상치보다 1 만 8000 톤 적은 양이다. 만약 추정치가 맞다면 1994 년 이래 가장 적은 수확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94 년은 (쌀 생산량이 150 만톤으로 추정되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기근이 시작됐다. 여기에 더하여 2020 년 8 월과 9 월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고, 수 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작지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배급제도가 상당히 차별적으로 운영되어, 농민을 비롯한 일반 시민은 배급을 받지 못한다. 식량 부족이 더욱 심화되고 식량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심히 우려된다. 기근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영양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인구 대다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해결하고 고립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필수 자원을 투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제재 조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가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하기를 국제공동체에 촉구한다.

23 쪽.

¹² 홍제화,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 경제”, 통일연구원, 5 쪽.

¹³ 상동.

¹⁴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쌀 전망 보고서 2020 년 5 월 월간 표”. 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98445 참조.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감옥 내 수감자는 질이 떨어지는 아주 적은 양의 식량을 받기 때문에 영양실조 사례가 빈번하다. 수감자는 많은 경우 가족이 가져오는 식량에 의존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로 인해 가족 면회도 어렵다. 감옥에서 안전한 식수 접근이 제한적이며, 위생 시설도 적절히 갖춰져 있지 않고, 보건의로 서비스도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송환된 이들은 또한 구금 시설 내에서 가혹한 환경에 처한다. 강도 높은 노동과 부족한 식사, 전염병, 과밀화 등으로 인해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진술도 있다.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는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보건기구, 유엔 에이즈(UNAIDS),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감옥 및 기타 수감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침을 따르며,¹⁵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벨슨 만델라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수감자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재차 수감자 석방을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을 앓고 있거나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동이나 임신부 및 수유부 등 가장 취약한 이들 석방을 고려하길 요청한다. 또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금 시설 내 위험을 경감해야 한다. 가령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석방이 임박한 이들에 대해 구금 대체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D. 인도적 지원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는 4 월 국민을 대상으로 자력갱생과 근검절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방 국가 원조에 기대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제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의로 접근성 또한 떨어진다. 3 월 25 일 발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 대한 전세계적인 인도적 대응 계획(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for COVID-19)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현재 자금 조달 정도가 낮고 현금 가용성이 극심하게 떨어져서 대응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격리 조치, 의료 물품 수입 불가, 국제 관계자 근무 교대, 정부 관계자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19.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해당 지침은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고자 고안된 조치의 여파를 완화하는 데 있어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다.¹⁶ 아울러 특별보고관은 다음을 정부에 권고한다. (a) 국제공동체로부터 검사를 위한 지원을 받고 대유행병과 관련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최소한 성별,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세분화된 데이터는 보건 의료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치될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b) 매체와 국내외 출처와 무관하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한다. 특히 봉쇄나 격리 시, 또는 기타 특별 조치를 취했을 때 전자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c) 인도적 지원 제공 국제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20.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2020 년 8 월 발간한 자료를 통해, 중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한 위기 상황 완화를 도울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제재 조치가 초래한 경제적 충격을

¹⁵ www.ohchr.org/Documents/Events/COVID-19/20200513_PS_COVID_and_Prisons_EN.pdf 참조.

¹⁶ 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Guidance.aspx 참조.

완전히 상쇄하기에는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적용된 제재 조치 때문에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기 어려워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해당국 내 상주하는 외국 관계자 수도 줄고, 아주 적은 수의 북 이탈자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한층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제재 조치가 해당국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우려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제재 조치를 일부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별보고관은 안보리 결의 1718 (2006)에 의거하여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도적 목적일 경우 제재 조치를 면제하도록 한 결정을 환영한다. 특별보고관은 안보리가 인도주의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 상시 면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고려하길 권고한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1874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문가패널이 권고한대로 특별보고관은 사무총장이 제재 조치의 인도적 여파를 연구하도록 촉구한다(S/2019/171 및 Corr.1, 별첨, 문단 1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국을 스스로 전세계 여타 국가로부터 소외시키고, 당국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수용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는 위험한 추세로,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재고하여 시급히 철회하도록 권고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는 보건, 식량, 물, 위생, 거주에 대한 권리 등 기본적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권리는 장단기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I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A. 노동 제도

21. 조선로동당이 통제하는 노동 제도는 국유제, 중앙계획경제, 주체 사상의 경제적 자립에¹⁸ 따른 정책과 관행을 바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일생을 결정한다. 현 노동 제도는 인권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은 당면 목적이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명시한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 하에 모든 정치적 절차와 국가 기관을 관장하고 통제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한다. 조선로동당 내 최상급 조직인 중앙위원회는 경제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계획위원회가 군 초모 수와 돌격대 모집원 수를 포함하여 각 경제 부문별 필요 인력 수를 결정한다.¹⁹ 조선로동당은 농장, 공장, 학교 및 마을 등 최소 사회 단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22. 국가가 관리하는 노동 제도에 고등학교 졸업 연령인 17 세 이후 국민 모두가 편입된다. 사회주의로동법 제 4 조는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노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니며, 노동 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노동에 참가한다고 명시한다.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로동법은 노동이 가능한 최저 나이를 16 세로 정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여성 진술에 따르면, 17 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며 국가에서 신분증을 발급한다. 2018 년 고등 교육 등록 비율이 여성은 18.18 퍼센트, 남성은 35.45 퍼센트를 기록했는데,

¹⁷ 홍제화, “코로나 19 충격과 북한 경제”, 통일연구원, 10 쪽.

¹⁸ 김일성이 세운 “주체” 사상은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¹⁹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9*(서울, 2019 년 9 월), 299 쪽.

이는 17 세 인구 대다수(여성 81.82 퍼센트와 남성 64.55 퍼센트)가 군 의무 복무를 시작하거나 돌격대 또는 국가 배정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의미이다.

23.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하는 제도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국제 규약에 1981 년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제 6 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일부 노동 형태는 강제 노동에 준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3)조에 의거하여 금지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국제 규약에 1981 년 당사국으로 가입했다.²⁰ 아동권리협약은 18 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경제적 착취와 위험한 작업에 동원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명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0 년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여러 노동 및 군 의무복무 형태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1. 군 의무 복무

24. 2003 년 12 월 제정된 군사복무법에 따라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여, 전국민이 정규군, 예비군 또는 민병대로 군 복무를 수행토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의무 복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군사복무법은 정부가 군 수요에 따라 복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부는 복무 조건과 개개인의 역할을 결정할 수도 있다.²¹ 2020 년 남성의 의무 복무 기간은 13 년, 여성은 8 년으로 파악된다. 복무 기간을 완수하기 전 영양실조로 인해 제대되는 경우가 흔하다. 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 군 복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9 년 여성은 총 초모 인원의 30 퍼센트, 2020 년 40 퍼센트를 차지했다.²² 군 복무를 완수하고, 조선로동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다만 한 이탈자는 “당원이 되어도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월급이나 배급을 주지도 않고 특권도 없다”고 말했다.

25.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규약과²³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협약(1930)(제 29 호)에 따르면 군 의무 복무는 강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식량권 및 보건권 등을 포함한 군 복무 환경은 인권 사안에 해당하며, 식량권 및 보건권은 군 의무 복무 기간 동안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 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 5 차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며, “특히 소년을 포함한 아동이 어린 나이에 군대화되지 않고 18 세 미만 아동을 징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CRC/C/PRK/CO/5, 문단 53 (b)).

2. 국가 배정 일자리

²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이 아니다. 강제근로협약(1930)(제 29 호) 제 2 조는 강제근로를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²¹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문서 입수, 전민군복무제의 실태를 살펴다(1): 청춘 없는 병역 13 년의 가혹함”, 립건강(오사카), 2020 년 7 월 13 일. www.asiapress.org/rimjintang/2020/07/military/military-service/ 참조.

²²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문서 입수, 전민군복무제의 실태를 살펴다(2): 김정인을 지키는 ‘자폭 용사로 단련’이라고 명기.” www.asiapress.org/rimjintang/2020/07/military/military-service2/ 참조.

²³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 조 (3)(c)는 “강제 노동”이라는 용어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의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26. 학업 또는 군 복무를 마친 후 국민은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 종사한다. 기혼 여성만 국가가 일자리에서 면제된다.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배정하고 이론적으로는 필수품 모두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 기업소와 협력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준민간 자회사가 운영된다. 수익이 나는 일부 기업은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뇌물을 써서 이런 직장에서 일하려고 한다. 한 여성 이탈자는 남편이 외화 수익을 내는 광물 채굴 기업소에서 근무했고 해당 기업소는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월급은 국가가 아닌 기업소가 벌어들인 수익으로부터 지급됐다.

27. 사회주의 노동법 제 5 조는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한다. 제 30 조는 근로자를 배치할 때 여러 요인(연령, 성별, 신체 조건, 희망 및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실제로는 가족 배경(성분),²⁴ 인맥, 국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개인의 선택보다 더 유의미하게 작용한다.²⁵ 한 이탈자는 농부의 자녀가 대학에 가는 사례도 있지만, 이후 본인들 고향으로 돌아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이탈자는 “북에서 노력 정도와 무관하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3 년 국가가 강제로 일자리를 배정하는 제도 하에서 노동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하는 제도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력이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E/C.12/1/Add.95, 문단 14).

28. 이러한 노동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시작됐다. 사회주의 헌법 제 25(3)조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준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식량 배급을 제공하는 국가배급제도는 1990 년대에 붕괴됐고, 심각한 기근이 뒤따랐다. 1990 년대 중반부터 국가 배정 직장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월급이나 식량 배급은 노동자나 노동자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킬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배정한 직장이 아닌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 18 호(2005)에서 사람들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비공식 경제에서 생계를 영위한다고 언급했다(문단 10).

29. 사회주의 헌법과 국내법은 전국에 적용되는 일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한다. 하지만 여러 진술에 따르면 국가 배정 직장 내 근로 조건이나 처우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일부 공장은 전기와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아예 일거리가 없는 반면 채굴 기업소 등은 장시간 고된 노동이 이뤄지며 근무 조건이 열악하고 안전 조치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보수만 지급하고, 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일터에 정해진 시간에 상주해야 한다. 사회주의노동법 제 18 조는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노동 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국가 배정 직장에 정해진 기간 이상 나가지 않는 행위는 처벌 가능한 범죄이다. 행정처벌법 제 90 조에 따르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노동단련대에서 3 개월 이하의 노동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형은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도록 직장 내 상급 관계자에게

²⁴ 성분은 개인 자신과 친척뿐 아니라 조상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계급을 나눈 제도이다.

²⁵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2019 년 5 월), 20-22 쪽.

너물을 지불한다. 최근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조치로 노동자 대상 통제를 강화하여, 그 결과 처벌도 강화되어 로동단련대 구금 건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다.

30. 국가의 직장 배정 제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노동권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최근 몇 년 간 상행위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었다. 주로 장마당에서 상행위가 이뤄진다. 정부는 일부 시장을 합법화하여 규제하려는 개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가 배정하지 않은 직장에서의 노동권은 아직 인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는 차별없이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며, 노동자와 가족이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승진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며, 합당한 수준의 업무 시간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등 차별없이 공정하고 호의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국가 직장 배정 제도는 국제 인권 표준에 따르면 강제 노동이 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은 일을 할지 말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아주 적은 수준으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지만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 속에 일을 하고, 로동단련대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직장에 상주해야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200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 2차 정기보고서를 검토했고,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3)(a)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 2장, 특히 제 14 조 및 제 18 조와 양립 가능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CCPR/CO/72/PRK, 문단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배급제도와 국가 직장 배정 제도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노동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 노동력 동원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 사업에 주기적으로 동원되어 무급으로 노동력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동원은 조선로동당, (기혼 여성을 비롯하여 국가가 일자리에 배정하지 않은 여성이 구성원인) 녀맹, 인민반을 통해 이뤄진다. 이탈자 진술에 따르면, 건설 및 농업 현장에 여성을 동원하는 사례가 최근 몇 달간 늘었다고 한다. 여성은 노동력 동원에서 면제되거나 강도가 낮은 일에 동원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대가로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고, 일부는 동원된 이후 정신 건강상 문제를 겪기도 한다. 조선인민군 소속 군인도 농업이나 광업 부문에 동원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조선로동당 당원 1만 2000명을 홍수 피해를 입은 두 지역에 보내 복구 작업을 돕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32. 젊은이를 좀 더 장기간 동원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인민무력성 산하의 준군사 조직의 여단으로 “상시” 돌격대 또는 “정식” 돌격대라 불린다. 가족 배경(성분)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못하거나 당국에 너물을 지급할 여력이 없거나 고아인 젊은이가 돌격대에 장기간 동안 무급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일부 젊은이는 돌격대에서의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기도 하는데, 돌격대 생활을 완수하면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여성 이탈자는 2019년 중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했는데, 2009년에 17세의 나이로 돌격대에 동원됐다고 한다. 당시 군 의무 복무를 대체하여 8년간 돌격대에서 일해야 하며, 이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 발전소 건설에 동원됐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어 2012년 달아났다. 이 여성에 따르면 돌격대에 동원된 후 이탈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는데, 수 일안에 돌아온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경우 로동단련대에 보내진다. 한 남성은 일찍이 고아가 되어 거의 평생을 꽃제비로 구걸하며 생활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진술했다.

4. 수감 시설 내 노동

33. 형법은 “로동교화형”과 “로동단련형”을 명시한다. 로동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관리소에 구금된 여성과 남성 모두 강도 높은 신체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국제인권표준에 어긋난다. 농업, 벌목, 광업 부문 노동뿐만 아니라 화장품 및 수제 보석 부품을 만드는 일도 한다. 여성 북 이탈자는 중국에 수출되는 가발이나 인형용 속눈썹, 종이로 된 모자 등을 만드는 일에 배정되었다. 여러 진술에 따르면 수감자는 강도 높은 신체 노동에 동원되지만, 적절한 식량이나 휴식은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 진술 자료에서 식량 부족 문제는 일관성있게 언급됐다. 수감자는 아주 적은 양의 강냉이 밥을 받고, 국은 주는 경우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타나 장시간 피로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체벌 등의 처벌도 있다. 한 사람이 할당량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사람이 속한 무리 전체가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34.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이나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협약(1930)(제 29 호)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수감 시설 내 노동은 강제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감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형을 살고 있으며, 주무당국이 직접 관할하여 노동이 수행되고, 민간 업체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 폐지 협약(1957)(제 105 호)은 어떤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도 정치적 강압이나 교육의 수단으로는 이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제 1 조). 더하여 넬슨 만델라 규칙 제 97 조에 따르면 교도 작업은 “성질상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는데” 가령 교도 작업이 고통, 괴로움, 슬픔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 103 조에 따르면 수감자 작업에 대한 공정한 보수 제도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수입의 일부를 떼어 저축 기금을 마련하여 석방 시 수감자에게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 101 조에 따르면 자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수감 시설 내에서도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직업병을 포함하여 산업 재해로부터 수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자유 노동자에 인정되는 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제 102 조에 따르면 수감자의 하루 및 주당 최대 작업 시간을 법률 또는 행정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정해진 작업 시간은 주당 하루의 휴일을 남겨두어야 한다.

35. 집결소 내 미결구금된 이들은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에 동원된다. 행정 절차에 따라 (즉,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된 이들도 재교육을 목적으로 로동단련형을 받는데, 형기는 5 일에서 6 개월 사이다.²⁶ 한 여성 이탈자는 점을 보러 갔다는 이유로 재판없이 로동단련대에 한 달간 구금됐는데, 로동단련대 안에서 나무 자르는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로동단련대 내 다른 수감자는 로동단련대에서 사용할 뿔감을 쥘 일을 했다. 또 다른 여성은 최근 대한민국에 입국했는데, 집결소에 구금된 기간 동안 국가 기업소와 농장에서 일했다고 진술했다. 집결소 수감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집결소 차원에서 챙기며, 수감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재판으로 형법에 따른 형을 받기 전인) 집결소 단계에서의 노동이나 (재판없이 징벌적 조치로) 로동단련대에서 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8 조는 이를 금지한다.

5. 노예화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수 천명은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무기한 수감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014 년 상세보고서에 관리소 수감자는 노예화에 해당하는 특성을 지닌 생활을 하며, 평생에 걸쳐 고되고 위험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 썼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제 7 조는 노예화를 반인도범죄로 명시한다. 조사위원회는 노예화에 해당하려면

²⁶ 행정처벌법, 제 14 조 및 제 18 조.

상당한 정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든 일반 수감시설이 노예화에 해당하는 상황을 충족시키는 것은 충족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 수감시설에 해당하는 교화소에 수감된 이들, 특히 수감 시 광산에서 강제되는 노동의 종류, 기간 및 강도는 노예화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때 의도적인 굶김, 비인간적인 거주 환경, 주어진 노동을 양적으로 완수하지 못하거나 탈주를 시도한 경우 적용되는 가혹한 처벌 등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했다. 좀 더 최근 사례에 해당되는 진술에 따르면 교화소 내 수감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동시에 질이 떨어지는 식사를 적은 양만 제공받고 위생 상태가 열악하며, 감방은 과밀화 상태이며, 노동 할당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알려진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상황

37. 2020년 1분기에 135명(남성 39명과 여성 96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가 대한민국에 도착했다.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40 퍼센트 낮은 수치이다.²⁷ 2분기에는 12 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경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경유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감시가 강화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이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38. 국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제 1 부부장이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도했다. 김여정은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내 북 이탈자가 지도부를 비난하는 전단지들을 북측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 양측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살포를 포함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최소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을 만들도록 요구했다.²⁸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9 조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보장하나, 전단 관련 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러한 자유를 국내에서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39. 특별보고관은 6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 이탈자를 향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인사와 위협을 가하는 것을 비난했다.²⁹ 특별보고관은 대다수가 여성인 북 이탈자는 어려움과 억압을 피해, 생계를 위해 기회를 찾아 떠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 침해의 피해자이며, 존경과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차 피해자가 되는 경험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북 이탈자는 인권 침해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며, 해당국 정부는 이들의 결정을 문제삼아 공격적이고 차별적이며 인격을 해치는 언사로 폄하하는 대신, 국가를 개방하여 유엔이 직접 현장 상황을 살피고 파악하도록 촉구했다.

40. 남북공동연락소가 7월 16일 폭파된 이후, 대한민국 통일부는 통일부 등록 시민사회단체 25 개를 대상으로 1 차 사무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7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또는 북 이탈자 정착 지원

²⁷ 대한민국 통일부 웹사이트 참조

www.unikorea.go.kr/eng_unikorea/relations/statistics/defectors/ (2020년 4월 10일 기준).

²⁸ Jacob Fromer, Oliver Hotham, “김여정, 북측으로의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도록 남측에 경고(Stop activists sending leaflets into North Korea, Kim Yo Jong warns South)”, NK News, 2020년 6월 3일.

²⁹ Kelly Kasulis, “유엔 인권 전문가, 북 이탈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을 중단하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촉구(End insults against defectors, UN human rights official urges North Korea)”, NK News, 2020년 6월 8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4 개 비영리기구에 통일부 등록 허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모두를 7 월 30 일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7 월 30 일 통일부와 온라인 면담을 통해, 사무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이나 북 이탈자의 대한민국 정착 지원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후 통일부 차관에 사무감사 및 행정 감사를 보류한 후, 유관 단체와 유의미한 대화를 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통일부는 9 월 109 개 단체가 감사를 받았고, 이 중 7 개 단체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16 개 단체는 북 이탈자가 운영한다고 보고했다. 10 월 6 일 기준, 22 개 단체 대상 감사가 완료됐고,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운영 방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41. 특별보고관은 중국 측에 긴급 청원을 7 건 보내 46 명의 북 이탈자에 대한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 북 이탈자는 송환될 경우, 고문을 비롯한 여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당할 수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최근 발표한 여성 구금 관련 보고서에서 다뤘다.³⁰ 따라서 북 이탈자는 현재 위치하는 곳에서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중국은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에 의거하여 북 이탈자를 재송환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자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온 이탈자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들은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

C. 강제실종 및 외국인 구금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강제 실종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해외 납치 건도 포함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516 명의 자국민이 납치됐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한국전쟁 중 납치된 이들은 수 만명에 이른다. 1969 년 12 월 11 일 대한항공 여객기 YS-11 납치로 11 명이 납치됐다.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던 39 명은 풀려났는데, 2020 년은 이들이 풀려난지 50 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을 비롯한 타 국적자는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 납치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납치된 12 명의 소재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특별보고관은 요코타 메구미의 부친 요코타 시게루 사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0 년 6 월 사망한 요코타 시게루는 오랜 기간 딸과 다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에 따르면,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 또는 비자발적 실종 건수는 316 건이다. 납치의 형태를 포함한 강제 실종은 심각한 범죄로 실종된 이들 모두의 생사와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지속되는 범죄이며, 따라서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현재 통제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공동체가 전략적 접근을 통해 납치라는 국제 범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납치 피해자 모두의 송환을 가능토록 하며,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요청한다.

43.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은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되어 있다. 두 명은 각각 2014 년과 2015 년 무기로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섯 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최신 정보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됐던 알렉 시글리 등 외국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 14(3)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보장도 받지 못했다. 가령 변호인 조력을 받고 유죄의 자백을 강요받지

³⁰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여전히 고통스럽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2020 년 7 월 28 일.

않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오토 웬비어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의식 불명 상태의 오토 웬비어를 석방했고, 미국으로 2017년 6월 송환된 후 몇새만에 사망했다.

V. 병행전략: 책임 규명과 협력

44.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를 조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여러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공동체와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인권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병행 전략을 유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정의 추구와 피해자 권리 옹호 및 향후 인권 침해 방지에 필수적이다. 결코 시한을 둘 수 없는 국제적 의제이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책임규명 의제를 발전시켜 가능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노력을 지지한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만연한 불처벌의 문화를 없애야만 한다. 불처벌의 문화 속에서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또한 지도부가 국민 모두에게 처벌을 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지도부가 취한 어떤 행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협력과 참여에도 투자를 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 차원에서 고립될 때, 침해를 당하는 일반 국민도 고립된다. 당국이 점차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국가 방문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안과 진입점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대의 연대와 통합은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깨워줬다. 협력은 장기간에 걸쳐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닦는 과정을 수반하며, 실제로 제도가 개선되고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도 점진적이며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해당국 정부에 네 차례 서신을 보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당국 차원에서 의료과학 전문가와 인도적 지원 활동가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국에 방문하여 제재 조치가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 등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평화 구상(peace initiatives)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일련의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이재민 모두에게 유감을 전하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서신 네 건에 대한 답신을 받지 못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이다.

46. 특별보고관은 또한 여러 인권 단체와 인권 메커니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인권이사회 제도 하의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인권 조약체, 유엔 상주조정실 및 기타 유엔 기구,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포함된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해당 국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이 2017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했는데, 이를 유의미한 전례로 삼아 향후 더 많은 국가 방문이 이뤄져야 한다.

VI. 결론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방역 상황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독립적으로 해당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 및 보건권을 보장하고자 기울인 노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중 국경 차단, 도시 및 지역 간 이동 제한, 엄격한 방역 조치, 인도주의 활동 감소는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만연한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됐고, 기아 발생 위험이 더욱 커졌으며, 특히 아동을 포함하여 이미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번 위기는 오랜 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의 적용을 받고 더 빈번하게 자연 재해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없는 환경 속에서 특별보고관은 국제공동체 차원에서 제재 조치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를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동안 외부 세계와의 접점이 감소하여 이미 깊숙히 자리잡은 인권 침해 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령 자유가 더욱 심각하게 제한되며, 차별과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구금 시설 내 처우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는 해당국이 한층 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으며, 해당국 내 국제 관계자 상주 비율이 줄고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북 이탈자 수가 감소하여 해당국 내 정보를 접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공동체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유행병을 하나의 국가가 피해갈 수는 없다. 고립이 아닌 국가 간 협력과 연대로부터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시이기도 하다. 가령 기술력, 의약품, 의료기기과 백신을 공유하고 인권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타계하려는 전세계적인 단합과 협력의 정신이 영감을 불어넣어 이해당사자가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2020 년은 한국전쟁 발발 70 주년이다. 한반도 주민 모두를 위한 평화는 실제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개념이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비핵화 의제에 가려져왔다. 유엔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평화, 인권, 개발 및 비핵화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 비핵화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확대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리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원칙을 지키며 인권을 근간으로 하여 평화협정에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³¹ 총회 제 75 차 회기 일반 토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 단장 모두발언, 2020 년 9 월 29 일. https://statements.unmeetings.org/statements/10.0010/20200929/azzQgcBAMYqv/WaUGJrE2AJvT_en.pdf 참조.

VII. 권고

50.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하루빨리 투자하여 식량, 물, 위생, 거주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우선순위에 둔다.

(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가 국민의 인권 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며, 특히 기본적인 자유와 경제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c)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침을 준수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가 미치는 여파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d)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세계보건기구, 유엔에이즈,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감옥 및 기타 수감 시설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침을 따르며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을 준수한다. 또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수감자 석방 방안을 고려한다.

(e) 형법과 기타 관련법을 검토하고 만연한 부패를 퇴치함으로써 국민이 노동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생계를 꾸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f) 일을 선택하고 수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 표준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혁한다.

(g) 핵심 노동 표준을 준수하고 타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다.

(h) 국가가 일자리를 배정하고, 노동력을 동원하며, 감옥 내 노동이 이뤄지는 관행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동 제도를 검토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에 따라 강제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i) 제재 조치가 국민의 경제권 및 사회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통계 및 기타 데이터를 공개한다.

(j)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접근성 보장을 확대하고, 시의적절하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k) 납치를 포함하여 강제 실종 혐의 건을 살피고, 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가족에게 정확히 알린다.

(l) 대한민국 국적자 여섯 명을 포함하여 현재 평양에 구금된 외국인이 영사 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영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때 이들의 조기 석방을 목표로 하며, 구금된 외국인이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넬슨 만델라 규칙)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대우를 받도록 한다.

(m) 출입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법과 실제 상황에서 인정하고, 송환된 이들이 송환과 동시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다.

(n) 가족 분리 피해자가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상봉을 재개한다.

(o) 국제 인권 표준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를 취한다.

(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과의 대화 절차를 시작하고,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국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51.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및 대한민국 내 북 이탈자 정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무검사 및 행정감사를 중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조치에 합의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상에 인권을 반영한다.

(c) 가족 분리 피해자가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한다.

(d)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6 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며, 해당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도 설립한다.

(e) 제 3 국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 보호 노력을 지속한다.

(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및 인도적 협력이 이뤄질 시에 인권을 바탕으로 한 틀(framework)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g) 통신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52. 특별보고관은 중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개인에게 재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b) 중국에 거주하거나 경유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정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정책적 제도 마련을 고려한다.

(c) 중국 내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및 정책적 제도 마련을 고려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타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의료 및 교육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가 박해를 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도울 수 있게 관련 국경 지역 이동을 허용한다.

53. 특별보고관은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국과 필요한 경우 유엔 여타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를 권고한다. 이 때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를 다룰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한다.

54. 특별보고관은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현재 이행 중인 조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을 시급히 재평가한다.

(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발을 방지하는 데 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지원한다.

(c) 유엔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활동가에게 자금 및 기타 지원을 확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시급한 인도적 필요에 대응하고 개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f)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책임 규명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55.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조치 해제를 고려한다.

(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제재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핀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권 관련 기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지원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56. 특별보고관은 시민사회단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기록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 노력을 지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정책이 변화하도록 촉구한다.

(b) 유엔 회원국과 협력하여 평화협정 논의를 발전시키고, 협상에 인권을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c)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해 상주하고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을 지속한다.

(d)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와 협력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시민사회 활동 공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유의미한 협력을 도모한다.